

MZ 세대와 韓·日 관계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
2022.01.06.

**상호간 문화교류 확대 따라
기성세대와 달리 서로 호감
역사 등 갈등에는 다른 양상
열린 자세로 관계 개선 필요**

MZ 세대가 화두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현재의 2030 세대로 전체 인구의 26.9%(약 1396만명, 2021년 기준)에 달하며, 2021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서울 인구의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비중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유통업계에서는 MZ 세대의 소비 경향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치권에서도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MZ 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외교와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한국이 일정 수준 발전된 이후의 삶을 향유해 온 이들이 자국에 대해 갖는 인식과 세계관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생각이 국가 간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식민시대를 경험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목도했던 한국의 기성세대가 일본을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끼면서 동시에 동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제적 침체와 대비되는 한국의 경제 발전, 세계적 수준의 IT, 전자제품 분야를 선도하고, K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 돌풍을 보며 성장한 이들은 선진국 일본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기성세대만큼의 동경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여행, 문화, 음식 등으로 일본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점도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성세대들은 한국을 여전히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 국가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역사적 미안함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왔다는 자부심도 있다. 반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하였다. 이들이 접한 한국은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처럼 미래세대의 주역인 MZ 세대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후 한·일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로의 문화, 관광,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긍정적이던 이들도 역사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른 세대 못지않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관심이 없거나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문화는 문화, 갈등은 갈등'이라는 인식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 여년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우호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많았다. 코로나 19로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축소되고, 미디어의 자국 중심적인 편파 보도를 주로 접하게 된 것에 따른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10년, 20년이 지나 이들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갈등 현안이 해결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화에 대한 호감은 문화, 그리고 콘텐츠의 힘인 것이지 국가의 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 긍정적인 인식은 한·일관계의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화교류로 인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에 대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서로에 대한 이해로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MZ 세대가 한·일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들의 편견 없는 열린 자세를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본 글은 1월 6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